한빛원전 냉각수 누수에 수명 연장 추진…지역민 반발

"5호기 냉각수 유출 정비 소홀"…1·2호기 수명연장 한수원 이사회 통과
일본 오염수 방류 앞두고 안전성 다시 도마에…핵발전소 중단 강력 촉구

영광군민과 광주·전남 환경단체가 29일 오후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핵 발전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환경연합 제공〉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냉각수 누설이 발견되고 노후 원전 연장운행 절차가 시작돼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빛원전 내부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결정을 두고 독단적 운영이라며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 1· 2호기의 연장 추진까지 공식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빛원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계획 예방정비 중인 한빛 5호기의 원자로 격납 건물 내 안전주입계통에서 소량의 냉각수가 누설된 사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보고됐다.

다행히 정비중에 발견됐지만, 한빛원전의 안전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냉각수는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액체다. 정상가동 중 냉각수가 누출된다면 원자로 내 핵연료가 녹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냉각수 누수는 발견시 원안위에 긴급 보고하는 사항이다. 5호기 냉각수 누설은 지난 2020년에도 발생했다.

원자력발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밸브 디스크에 손상이 일어나거나 밀봉 부위가 잘 닫히지 않았을 경우 종종 누수가 발생한다"면서 "누수는 곧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관리 비용을 아끼고 예방 정비를 소홀히 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한병섭 한국수력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소량의 냉각수 누수는 어느정도 용인을 하는 편이지만 만약 가장 약한 부위인 증기발생기 세관(가느다란 관)에서 누수가 생기면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5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자 오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 수명 만료를 앞 둔 한빛1·2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

수명이 18년 남은 5호기의 안전성을 못믿는데 당장 수명 만료를 앞둔 1·2호기의 안전성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수원은 29일 오후 3시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빛 1· 2호기 계속 운전(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및 경제성평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수원은 30일 원자력발전소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수원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심사를 토대로 원전 사업자가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를 했는지 심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계속 운전 기간 동안의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절차에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포함된다. 오는 10월~11월께 주민설명회가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추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만료 전 수명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당장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 공식화가 전해지면서 29일 한빛원전 앞에서는 지역민들과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한빛 1·2호기는 격납건물 내 수십 개의 공극과 1000여개가 넘는 철판부식이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며 "1988년부터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에게서 무뇌아, 대두아가 태어났고 방사성 물질 피폭과 백혈병 사망 등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그 어디에도 안전하고 값싼 핵발전은 없다"며 "지불하지 않은 위험과 비용은 인근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강제동원피해 15명 중 11명 3자 변제금 수령
시민단체, 수령 거부 4명 위해 시민 모금 나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중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당사자는 양금덕(92)할머니와 이춘식(103)할아버지를 포함한 모두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한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수령을 거부 중인 4명의 당사자를 위한 '역사정의 시민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제안문을 통해 "당사자의 외로운 투쟁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 정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훼손되는 처참한 상황을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시민 모금은 또 다른 국채보상운동"이라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며 일본의 사과와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시민 모금은 오는 8월 10일까지를 1차 기한으로, 최종 기한은 2024년 6월로 정했다.10억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모여진 기금은 행정안전부의 1365 기부 포털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용기있는 투쟁을 지원하고 역사 정의를 지키는 시민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정부의 안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포기하자는 것인 반면 '역사정의 시민모금'은 가해자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없이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면서 "시민모금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자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상해죄→살인죄 적용 구속기소

배우자를 목졸라 숨지게 한 남편이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32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A(70)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5일 새벽 고흥군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 B(66)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단순 상해죄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부검결과 경구압박 외에 'B씨의 지병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는 점, 현장증인이 없는 점, 통신수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들어 단순 상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신체에서 방어흔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지난 2월부터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법의학 교수 3명에게 의뢰한 감정 결과와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통해 살해 정황이 있다는 소견을 확보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SNS 투자방서 고수익 미끼 1000억대 사기
유사수신업체 대표 구속

SNS 투자방이나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700여명에게 1000억원대의 사기를 친 40대 유사수신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북구 소재 그룹 대표 A(4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773명을 모집해 11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자들에게 연 8~12%의 이자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성공을 믿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히 A씨가 9개 계열사를 둔 그룹 본사를 광주에 두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체가 서류에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해 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한희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